

# 시·도민 92% “광주·전남 상생 필요”...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설문조사

시·도민 대부분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제조건으로는 공감대 형성과 미래 계획의 공동 수립 및 추진, 단계적의 의지 등을 꼽았다.

23일 통합을 앞둔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상생발전 14대 과제 중 하나인 ‘광주·전남 상생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시·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919부의 설문조사지를 공동분석했으며, 그 결과 시·도민의 92.3%가 ‘(상생이)필요하다’고 답해 상생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염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이 공동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활권·경제권이기 때문(45.4%)’,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29.5%)’,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구조를 타파해야 하기 때문(1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공감대 형성(42.4%)’, 다음은 ‘광역단위 계획의 공동수립 및 추진(20.8%)’, ‘자치단체장의 상생발전 의지(18.0%)’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위한 14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 수립(18.8%)’에 이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15.5%)’,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12.5%)’,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 및 창조(10.3%)’,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9.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8.1%)’ 등을 꼽았다.

## 46% “동일 생활·경제권 회복을”

### 광주는 문화, 전남 휴양 중심으로 우선 협력분야 경제 활성화 꿈아

광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중심도시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융복합산업 중심도시(29.2%), 국토 서남권 거점도시(16.5%), 민주인권의 성지(7.3%)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건강·휴양·힐링의 중심지가 2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은 융복합산업 중심지(24.0%), 생태·문화관광 중심지(23.2%), 친환경 생명농업 중심지(19.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민은 장래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광주·전남 경제통합(26.9%)’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24.9%)’을 꼽았고, 우선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38.5%)’,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육성(16.0%)’, ‘문화 융성 및 관광 활성화(1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p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6월말 ‘광주·전남 상생발전 비전 및 전략’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칩거 사흘째...이총리 언제나 나올까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가 칩거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인근 전망대에 외국의 관광객들과 이 총리의 모습을 담기 위해 대기하는 취재진이 몰려있다. /연합뉴스

## 입 다문 측근들...檢 ‘성완중 수사’ 난관

### 소환 박준호·이용기 모르쇠 일관 결정적 단서도 없어 ‘돌파구’ 고심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수사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소환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인 하나같이 성완중 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경남기업 측의 증거 인멸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귀인’을 기다린다”는 수사팀의 기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성 전 회장 측근 가운데 21일 가장 먼저 소환된 박준호(49)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장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고, 22일 검찰에 나온 수행비서 이용기(43)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십수년간 성 전 회장과 동고동락한 핵심 측근들이다. 성 전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던 터라 검찰 압박에서는 이번 수사의 성과가 두 사람의 ‘입’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 전 상무를 비롯한 성 전 회장 측근들도 성완중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가 대체로 순항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수사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하고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간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의혹을 부인했다. 측근들마저 입을 닫으면서 수사팀으로서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수사팀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우선 이들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2일 새벽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박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과거 검찰에서 기업 비리 수사를 했던 한 변호사는 “현재 수사팀으로서 의혹의 핵심 증인격인 이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심복들이 만큼 생전에 의심받았던 횡령·분식회계 행위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 아래 경남기업 비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일 수도 있다.

이씨를 비롯한 성 전회장의 측근들을 추가로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럴 경우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저인망식 ‘단서 수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한 많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하나하나 꿰어맞추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리스트 인사의 주변인물들이 예상보다 일찍 검찰에 나올 수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종종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는 전방위적으로 관련 진술이나 자료를 모아 하나하나 따져가는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곤 했다”며 “이 의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단서 하나가 수사의 활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무성 “성완중 특사, 뗏뗏하면 조사 해보자”

세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07년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른 죄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뗏뗏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맞받아 쳤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문 대표가 ‘성완중 특사’를 “후임자(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를 정치적으로 고리

한 사면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그 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성완중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의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자원 비리는 상설 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중 사건은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재인 “성완중 사면 이명박 요청에 의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빠진 채로 1차 사면자 명단이 확정된 당일인 2007년 12월 28일 이뤄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간 만찬 회동과 관련, “그런 회동이 그 분(성 전 회장)을 사면하게 하는 데 분위기가 상의 도움을 줬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관악을 보궐선거 지원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회동 자리에서 성 전

회장 사면이 논의된 적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임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무슨 개인의 사면 문제가 논의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이 이뤄지기 앞서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사면을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만 하다”면서도 “분명한 건 그분의 사면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5년 5월 4일 (월) ~ 8일 (금) | 빛고을 시민문화관

4일, 6일, 7일, 8일 PM 6시30분 5일 AM 11시, PM 2시, 4시

주최·주관 | 광주일보 후원 |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협찬 | 새마을운동광주광역시사무점 애담은 어방이서점 도서출판 아랑

예매 | 인터파크 티켓링크 문의 | 062-523-0333